

# 與 “애국지사 희생 존경” vs 野 “한일관계 굴욕 개선”

### 3·1절 104주년 여야 공방 국힘 “방탄국회로 의미 퇴색” 민주 “윤 대통령 역사관 의심” 정의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

여야 정치권은 1일 3·1절 1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한목소리로 기리면서, 현안 등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굴욕’에 비유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는 “역대 최악의

기념사”라고 혹평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강한 국력으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3·1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대일 외교와 대통령 기념사를 혹평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023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할 3·1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겠다.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

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구걸하고 있다. 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 요구는 입도 벅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이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글자수를 세어보았다. 모두 1022자”라며 “진지함도 성의도 느껴지지 않는다. 내용을 보면 더 한심하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인가’ 싶다”고 직격했다. 정의당도 “3·1 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

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협력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파트너십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친일 굴종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뽀니일 뿐”이라며 “이게 3·1절날 대통령이 할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윤 정부에서 황행하는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의 정치를 넘어 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 3·1운동 정신”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정의, 쌍특검 이견 확인... “추후 재논의”

###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수사 대상·특검 추천 등 쟁점 정의 “김건희 특검 발의 준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달 28일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정의당은 세부안 조정되지 않으면 ‘쌍특검’ 추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가지 원칙이 지켜진다면 공동발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내용 안에 이 2가지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가지 원칙과 관련해 “정의당은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50억 클럽’ 그 자체를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관련된 범죄 혐의 정도로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보다 많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대장동 관련 내용까지 확장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추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정의당의) 제안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서 정의당이 제시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조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고 교착상태 빠진다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특검안 발의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교란하는 중대범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 수석부대표는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했다”며 “수석 간 일상적 소통은 계속하되, 원내대표 간 논의가 주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특검법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한을 정해 놓고 심사를 강제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2개의 특검법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의 김 여사 원포인트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의당과의 공조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법무부 인권국장 등 9개 정부 개방형 직위 공모

### 인사혁신처, 17일까지 접수

법무부 인권국장 등 9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개방형 직위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직위를 가리킨다.

7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7개, 과장급 2개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1개는 민간 출신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법무부 인권국

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국립나주병원장, 외교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나토대표부 공사참사관, 환경부 감사관 등이 있다.

과장급 직위는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과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손 잡은 이용수·양금덕 할머니 3·1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이용수, 양금덕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다. 뉴스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 고조

### ‘비명계’ 박광온·이원욱 등 거론 당내 기류 놓쳐 조기경선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와 관련,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후보가 나와 대결구도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중진 안규백 의원과 3선 박광온·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재선) 등이 거론된다.

이원욱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되며, 친문재인(친문)계인 박광온·전해철 의원은 범비명계에 속한다.

안규백·윤관석·김두관 의원은 계파색이 다소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명계 일각에선 이해찬계인 홍익표 의원을 지지하

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차기 원내대표는 비명계나 범비명계 몫으로 굳어지는 듯한 분위기였다. 원내대표까지 친명계가 꿰차게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명계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차기 원내대표 경선 구도를 비명계대 친명계간 대결 구도로 바뀌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친명계에서는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차기 원내대표가 친명계의 의대로 뽑힌다면, 당내 갈등은 계파간 세력 다툼으로 확산될 것이라 점이다. 친명계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내세우거나, 사실상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의원 수 대결에서 이긴다면 비명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 관측이다. 이는 당내 분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차기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계파를 떠나 당내 중진들과의 소통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후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 안팎에선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친명계 위주로 소통하다가, 중진 의원 등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빠르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는 ‘조기 경선’ 주장이 나온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기 경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4월7일까지다. 서울=김선욱 기자

## 중앙선관위, 4·5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9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5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9곳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

울)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 나, 전북 군산 나) 2곳 등 3곳이다.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원) 1곳, 기초의원 4곳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서울=김선욱 기자